

미술품·한우에도 투자… 코스콤 ‘토큰증권’ 선봉에 서다

투자의 민주화 ‘토큰증권’

‘토큰화’ 거래 비용·시간 줄여
증권사 없이 블록체인의 거래 가능
미술품 유통화, 고가자산 소액투자

‘토큰 증권(ST·Security Token)’ 시장 참여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토큰 증권 법제화가 속도를 내면서다. ‘토큰증권’이란 종이나 전자방식이 아닌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한 증권을 말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 미술품이나 한우 등 처럼 특별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열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토큰증권이 투자의 ‘민주화’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콤은 금융사들을 토큰증권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잡이를 하고 있다. 코스콤은 증권사들과 손을 잡고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사업, 스테이블코인 관련 신사업 등 시장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큰증권 법제화 속도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한 디지털 기반 증권이다. 쉽게 말해 증권이라는 음식이 있다면, 음식을 담은 그릇이 토큰(블록체인)인 것이다. 종이로 주식·채권을 거래하는 실물증권, 인터넷 전산을 통해 거래하는 전자증권 방식에서 이젠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하는 토큰증권으로 새로운 거래 인프라가 추진되는 것이다.

토큰화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거래 비용과 시간 모두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주식을 거래할 땐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중앙화된 서버에 저장된 소유 정보 등을 확인하는 복잡한 결제 방식이 진행된다. 거래 시간도 지연되고 비용도 발생한다.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 매매일 이틀 뒤(T+2)에 계좌로 들어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큰증권은 암호화된 분산원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이과정이 모두 사라진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4월 보고서에서 “금융자산을 토큰화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하면 거래의 신속화, 효율화, 거래비용 절감, 투명성 향상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연 코스콤 상무(왼쪽에서 여섯번째)와 류시웅 iM증권 상무(왼쪽에서 다섯번째)가 8월 27일 코스콤 본사에서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코스콤은 6월 1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DB증권과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코스콤은 7월 23일 NICE피앤아이와 토큰증권 가치평가 및 서비스 인프라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TO법안 주도’ 윤창현 사장 지휘 플랫폼 구축, 테스트베드 실증 완료 “스테이블코인 도입 사전설계 전략”

기존에 투자하지 못했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차별화된 장점이다. 지금까지 증권사 등에서 중개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구매하기 어려웠지만, 고객 확인제도(KYC)로 신원만 인증했다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도 블록체인망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진 자산을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다.

토큰증권에서는 금액이 큰 자산도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고, 미술품처럼 유통화되지 않은 자산도 쉽게 유통화할 수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사기 어려운 자산도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토큰증권이 투자의 ‘민주화’라는 말도 나온다.

지지부진하던 토큰증권의 법제화 속도도 낼 전망이다.

지난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디지털자

산법)에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인프라 관리 방안이 담겼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과 ‘토큰증권 법제화’를 언급했던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토큰증권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토큰증권 자산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콤, ‘토큰증권’ 인프라 주도

가장 주도적인 곳은 코스콤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업계다. 기존의 주식과 채권 등부터 토큰화해 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코스콤은 최근 iM증권과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키움증권,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BNK투자증권, DB증권 등에 이어 일곱번째 파트너다.

코스콤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증권사·발행사·유관기

관 등과의 협력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코스콤이 추진 중인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사업은 다수 증권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독자적 플랫폼을 구축하기 부담되는 증권사들의 비용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STO 법안을 주도했던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토큰증권 사업을 직접 지휘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후 STO 관련 태스크포스(TF)인 ‘STO사업추진TF부’를 사장 직속부서로 신설하기도 했다. 김완성 코스콤 디지털자산사업추진TF부 부서장은 “자본시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토큰증권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인프라 지원하겠다”며 “법제화 진행에 발맞춰 구체적인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금융기관 및 발행사를 위한 최적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

코스콤 전경.

을 더 개선·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연돼 왔다. 반복되는 난항 속에 업계의 실망이 커졌지만 코스콤은 오히려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며 선제적으로 발행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한국예탁결제원과 총량관리를 위한 테스트베드 실증도 완료한 상태다.

코스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토큰증권 관련 신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토큰증권의 청약·유통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기술검증(PoC)을 진행 중이다. 결제와 청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 방식을 통해 자본시장에서도 디지털 화폐 기반의 안정적인 신뢰성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코스콤에 따르면 해당 방식은 자금이 없으면 주식이 이전되지 않고, 주식이 없으면 자금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김성덕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장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이 안전하고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사전 설계·준비하는 전략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융위,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2곳 제한’

시범운영 서비스 제도권으로 편입 플랫폼 난립 막고 유통성 집중시켜

정부가 조각투자 시장의 ‘유통판’을 연다. 음원저작권·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를 제도화해 최대 2곳에만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플랫폼 난립을 막고 유통성을 집중시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되던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조치다. 지난 6월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 제도화에 이어 이번 유통(Secondary m

arket)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 개선은 일단락된다.

정부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2024년 기준 연간 매수거래액 145억원), 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통성이 분산돼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사가 2곳 미만이면 그에 맞춰 인가가 부여된다.

신청사가 다수일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2017·2021년), 부동산신탁업(2019년) 인가 사례처럼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일괄평가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신청사 사업계획 타당성, 자본력, 건전경영

등을 점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최종 인가 대상을 결정한다.

심사 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인가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유통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구성 여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참여 여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약 1달간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또 이달 18일에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 설명회도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국거래소, 공시제도 지역설명회 개최

부산·대구 등 전국 4개지역 대상

한국거래소가 지역별 코스피 상장기업 공시담당자를 위한 주주가치 제고 관련 공시제도 설명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전국 4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코스피 상장사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배구조공시 등 공시제도 관련 지역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배구조공시, 영문공시를 비롯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공시제도 사항을 지역기업에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지역설명회는 이날 부산·울산·경남 지역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 대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설명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

시의무대상이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 예정임에 따라 공시의 원활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 준비 사항과 함께 최근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정관 개정안내, 영문공시 활성화 추진과 번역지원 및 지속가능경영 공시 현황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거래소는 “이번 설명회가 지역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인식 전환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시제도에 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상장기업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 및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